

2011년 임금동향과 2012년 전망

정 성 미*

I. 2011년 임금동향

1. 「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 2011년 명목임금, 1.0% 상승

2011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844천 원으로 2010년에 비해 1.0% 상승하였다(표 1 참조).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의 임금총액은 0.9% 감소한 반면,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비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15.1% 증가하였다. 비상용직의 증가 영향으로 임금근로자 전체의 임금증가는 플러스를 기록했다.

상용근로자의 2011년 임금상승률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정액급여는 4.8% 상승하여 2009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초과급여와 특별급여 상승률은 각각 8.4%, 19.3% 감소하였다. 상용직 임금총액이 마이너스 증가를 기록한 것은 초과급여와 특별급여가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전체근로자의 실질임금은 2010년보다 2.9% 감소하였고, 상용직의 실질임금은 4.7% 감소하였다.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실질임금상승률은 전체근로자와 상용근로자 모두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한편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에 나타난 2011년도 월평균 임금총액은 2,032천 원으로 전년대비 4.3% 상승하였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 전국 근로자가구의 2011년 월평균 근로소득은 3,613천 원으로 전년대비 5.2% 상승하였다. 두 자료 모두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mjung@kli.re.kr).

<표 1> 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단위: 천 원/월, %,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사업체 노동력 조사	전체근로자(5인 이상) (상승률)	-	-	2,569 (-)	2,636 (2.6)	2,816 (6.8)	2,844 (1.0)	
	실질임금상승률	-	-	-	-0.1	3.8	-2.9	
	상 용 직	임금총액 (상승률)	2,542 (5.7)	2,683 (5.6)	2,802 (4.4)	2,863 (2.2)	3,047 (6.4)	3,019 (-0.9)
		실질임금상승률	3.4	3.0	-0.2	-0.5	3.4	-4.7
		정액급여 (상승률)	1,874 (6.7)	1,992 (6.3)	2,057 (3.3)	2,139 (4.0)	2,234 (4.5)	2,341 (4.8)
		초과급여 (상승률)	158 (5.4)	166 (5.5)	179 (7.5)	175 (-2.2)	196 (12.2)	179 (-8.4)
		특별급여 (상승률)	511 (2.4)	526 (2.9)	566 (7.7)	550 (-2.8)	617 (12.3)	498 (-19.3)
	비상용직 임금총액 (상승률)	-	-	1,052 (-)	1,073 (1.9)	1,056 (-1.6)	1,215 (15.1)	
	경제 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임금총액 (상승률)	1,656 (3.9)	1,745 (5.4)	1,846 (5.8)	1,852 (0.3)	1,949 (5.2)	2,032 (4.3)
		실질임금상승률	1.6	2.8	1.0	-2.4	2.2	0.3
가계 동향 조사	전국(2인 이상, 근로자가구) (상승률)	2,926 (6.5)	3,098 (5.9)	3,287 (6.1)	3,280 (-0.2)	3,435 (4.7)	3,613 (5.2)	
	도시(2인 이상, 근로자가구) (상승률)	2,967 (6.4)	3,163 (6.6)	3,383 (7.0)	3,322 (-1.8)	3,479 (4.7)	3,670 (5.5)	
소비자물가상승률		2.2	2.5	4.7	2.8	3.0	4.0	
실질GDP상승률		5.2	5.1	2.3	0.3	6.2	3.6	
근로시간 (월)	전체근로자(5인 이상) (상승률)	-	-	176.7 (-)	176.1 (-0.3)	176.7 (0.3)	176.3 (-0.2)	
	상용직 (상승률)	191.2 (-2.0)	188.4 (-1.5)	184.8 (-1.9)	184.4 (-0.2)	184.7 (0.2)	182.1 (-1.4)	

주: 1) 고용노동부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는 상용근로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던 『매월노동통계조사』를 2007년도부터 전체 근로자로 확장한 것임.

2) 2011년 이후 『사업체고용동향조사』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를 통합하여 『사업체노동력조사』로 변경하여 조사대상을 종사자 1인으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변경하며 산업분류를 개편(KSIC 8차 → KSIC 9차)하고 2008년 이후 소급함.

3) 임금자료 중 고용노동부 자료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통계청 자료는 가구조사로 임금근로자 전체가 대상임.

4)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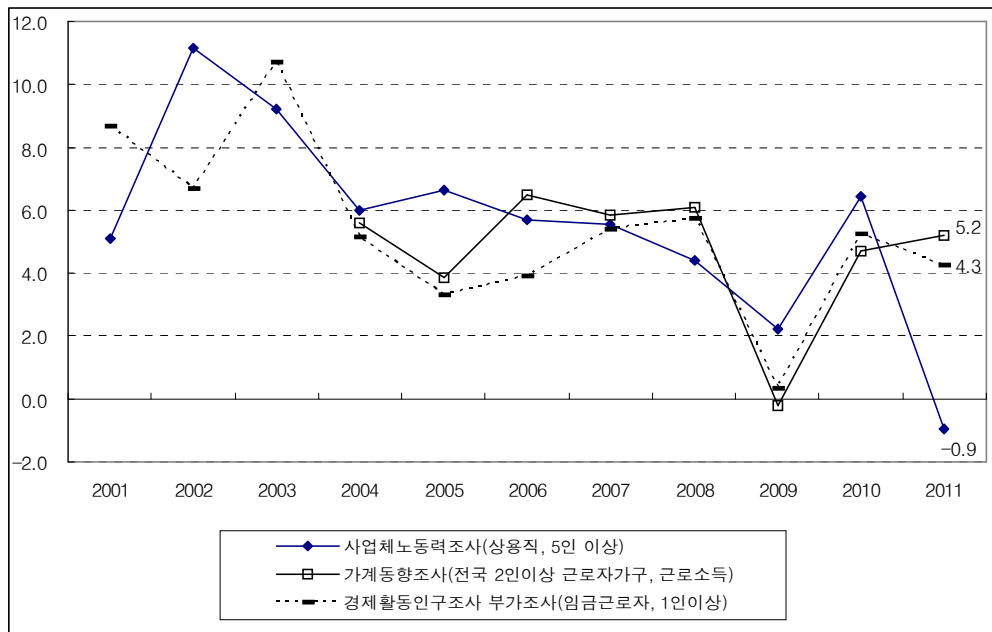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2. 상용직 초과급여와 특별급여 감소의 영향으로 임금상승률 둔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의 명목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의 일이다.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로 시계열을 확장해 보아도 1980년 이후 마이너스 임금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9년(-2.5%) 뿐이다. 지난해 임금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2011년 경제성장률 3.6%(한국은행))가 일차적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결과와 「가계동향조사」의 결과는 「사업체노동력조사」와 상이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 2006년 이후 세 자료 모두 대체로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인 2009년에 모두 임금증가율이 크게 감소한 이후 2010년 회복하였다. 그러나 2011년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각각 5.2%, 4.3% 증가를 한 반면,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는 2009년(2.2%)의 임금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조사별 명목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주: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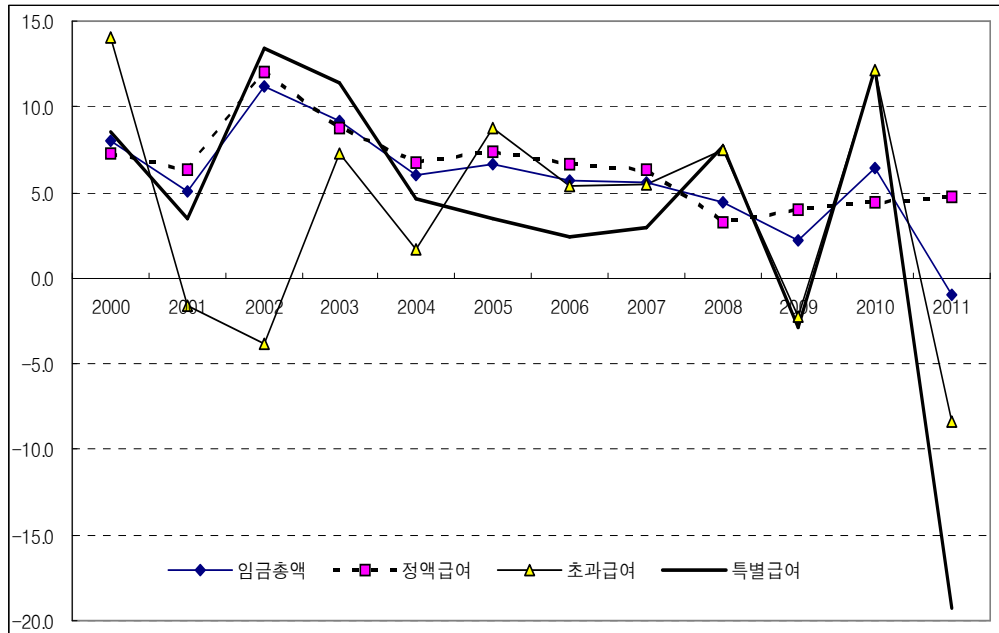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KOSIS.

「사업체노동력조사」의 2011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항목별 임금상승률이 2010년 이전과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참조). 향후 임금수준에 누적되어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정액급여의 상승률은 4.8%로 2010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2008년 큰 폭으로 하락했던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상승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정액급여의 상승률은 2004년 이후 4~6%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초과급여와 특별급여의 상승률은 2011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2009년 마이너스증가율을 보인 이후 2010년 기저효과를 보이며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2011년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해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1년 경제성장률은 3.6%로 2009년 경기침체기의 성장률(0.3%)에 비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초과급여와 특별급여가 2009년보다 더 큰 수준으로 하락한 것은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그림 2]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주: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3. 2011년 노사간 협약임금 인상률 예년의 수준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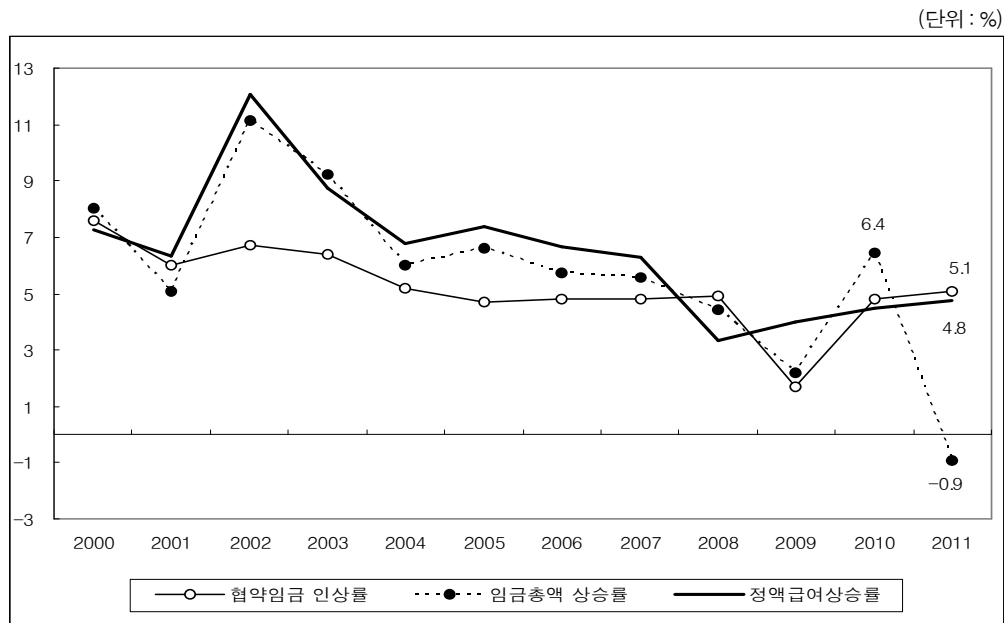
임금상승률의 결정은 경제 여건 및 노동시장 상황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어디까지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교섭을 직접적인 매개로 하기 때문에 노사관계 요인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이루어진 임금교섭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협약임금 인상률’ 통계에 따르면 2011년 100인 이상 사업장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5.1%로 2010년의 4.8%보다 0.3%p 증가하였다. ‘협약임금 인상률’은 특별급여 등 변동성 급여가 제외되고 정액급여 등의 고정성 급여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체조사 결과 나타난 ‘임금총액 상승률’보다 연도 간 변동이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2011년의 임금상승률에는 상용근로자의 초과급여와 특별급여의 영향이 크게 작용해 상용직 임금총액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정액급여 상승률은 협약임금 인상률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3 참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으로 2010년 대비 5.1% 인상된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그림 3]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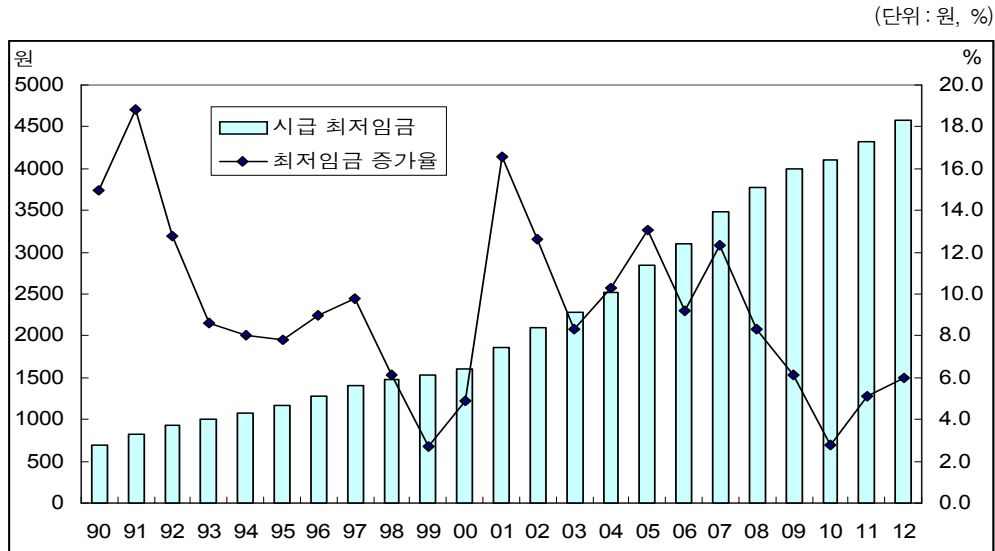


주: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임금총액 상승률은 5인 이상 상용직 기준임.

자료: e-나라지표, www.index.go.kr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2011년 대비 6.0% 인상된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최저임금 증가율은 2007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가다 2010년 최저수준인 2.8% 이후 증가율이 상승했다(그림 4 참조).

[그림 4] 최저임금 인상을 추이



자료: e-나라지표, www.index.go.kr

II. 2011년 부문별 임금동향

1. 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상승률 증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통해 사업체 규모별 임금상승률을 보면, 10~29인 규모 사업체에서 2.8%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100인 미만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100~299인 사업체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1% 미만의 낮은 상승을 했다(표 2 참조).

사업체규모 간 임금격차는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0.3%로 2010년의 8.7%에 비해 크게 둔화된 영향으로 모든 규모에서 임금격차는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임금 대비 전규모의 임금은 68.5% 수준으로 2010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하였다.

<표 2> 규모별 임금 추이

(단위: 천 원/월, %, 300인 이상=100.0)

	2008년 평균		2009년 평균		2010년 평균		2011년 평균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전규모	2,569 (-)	[67.8]	2,636 (2.6)	[69.2]	2,816 (6.8)	[68.0]	2,844 (1.0)	[68.5]
5~9인	1,834 (-)	[48.4]	1,887 (2.9)	[49.5]	1,971 (4.5)	[47.6]	2,018 (2.4)	[48.6]
10~29인	2,153 (-)	[56.9]	2,187 (1.6)	[57.4]	2,318 (6.0)	[56.0]	2,382 (2.8)	[57.3]
30~99인	2,382 (-)	[62.9]	2,507 (5.3)	[65.8]	2,659 (6.0)	[64.2]	2,729 (2.6)	[65.7]
100~299인	2,796 (-)	[73.8]	2,830 (1.2)	[74.3]	2,991 (5.7)	[72.2]	3,019 (0.9)	[72.7]
300인 이상	3,786 (-)	[100.0]	3,809 (0.6)	[100.0]	4,140 (8.7)	[100.0]	4,154 (0.3)	[100.0]

주: 1)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임.

2)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3) []안의 수치는 300인 이상을 기준으로 상대 비중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2. 상용·임시·일용직 모두 임금 상승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를 이용하여 종사상 지위별 임금추이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2011년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2,567천 원으로 2010년 대비 2.7% 상승하였으며, 임시직의 월평균 임금은 1,275천 원으로 2010년 대비 4.5%, 일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945천 원으로 2010년 대비 5.3%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임시·일용직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표 3> 종사상 지위별 임금 추이

(단위: 천 원/월, %)

	상용직	임시직	상대수준 (상용직=100)	일용직	상대수준 (상용직=100)
2001	1,649 (8.0)	916 (7.5)	55.6	689 (6.7)	41.8
2002	1,769 (7.3)	971 (5.9)	54.9	760 (10.3)	43.0
2003	1,958 (10.7)	1,032 (6.4)	52.7	759 (-0.2)	38.8
2004	2,036 (4.0)	1,080 (4.6)	53.0	779 (2.6)	38.2
2005	2,117 (3.9)	1,102 (2.0)	52.1	783 (0.6)	37.0
2006	2,184 (3.2)	1,139 (3.4)	52.2	814 (4.0)	37.3
2007	2,299 (5.3)	1,163 (2.1)	50.6	823 (1.1)	35.8
2008	2,409 (4.8)	1,212 (4.2)	50.3	875 (6.3)	36.3
2009	2,419 (0.4)	1,170 (-3.5)	48.4	858 (-2.0)	35.5
2010	2,500 (3.4)	1,221 (4.4)	48.8	898 (4.7)	35.9
2011	2,567 (2.7)	1,275 (4.5)	49.7	945 (5.3)	36.8

주: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2012년 상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임시직과 일용직의 임금격차는 2011년에 비해 일시적으로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의 임금수준은 상용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추이는 <표 4>와 같다. 2011년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388천 원으로 2010년 대비 4.1%,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348천 원으로 2010년 대비 7.1% 상승해 비정규직의 임금상승률이 더 높았다.

<표 4> 정규비정규직의 종사상 지위별 임금 추이

(단위:천 원/월, %)

	정규직	비정규직
2002	1,456 (-)	977 (-)
2003	1,678 (15.3)	1,028 (5.3)
2004	1,771 (5.6)	1,152 (12.0)
2005	1,846 (4.2)	1,156 (0.4)
2006	1,908 (3.4)	1,198 (3.6)
2007	2,008 (5.3)	1,276 (6.5)
2008	2,127 (5.9)	1,296 (1.6)
2009	2,201 (3.5)	1,202 (-7.3)
2010	2,294 (4.2)	1,258 (4.7)
2011	2,388 (4.1)	1,348 (7.1)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III. 2012년 임금상승률 전망

1. 국민경제생산성에 근거한 2012년 임금인상률은 5.9%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임금(엄밀하게는 경제전체의 근로소득) 상승률을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로 측정되는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일치시키면 임금인상에 의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 push inflation)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기여분만큼 임금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분배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생산성 증가에 조응하는 임금상승률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우선 완전경쟁시장 및 1차 동차 생산함수($y = AL^\alpha K^\beta$, $\alpha + \beta = 1$)를 가정하고 이윤 극대화 조건을 정리하면 식 (1)이 도출된다.

$$\frac{W}{P} \equiv w = MP_L \equiv \alpha \frac{y}{L} \dots\dots\dots (1)$$

여기서 W 는 명목임금, P 는 물가(소비자물가지수)를 나타내며 w 는 실질임금을 의미한다.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실질임금은 노동의 기여분, 즉 노동의 한계생산성만큼 주어지기 때문에 $w = MP_L$ 의 등식이 성립하며, 노동의 한계생산성은 산출량(실질GDP) y , 노동투입량(근로자 수) L ,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 α 에 의해 정의된다.

식 (1)에 자연대수(log)를 취하고 시간에 대하여 미분하면(노동소득분배율 α 는 일정하다고 가정), 식 (2)와 같은 생산성임금제에 근거한 임금인상률이 도출될 수 있다.

$$\dot{W} = \dot{y} + \dot{P} - \dot{L} \dots\dots\dots (2)$$

이론임금인상률 = 실질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취업자증가율

위의 관계를 국민경제에 적용하기 위해 2012년 경제 및 노동시장 전망치를 식 (2)에 대입하면 생산성임금제에 근거한 이론임금인상률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2012년 생산성 임금제에 근거한 임금인상률을 계산하여 보면, 경제성장률 전망치(한국은행, 3.7%)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한국은행, 3.3%) 그리고 취업자상승률 전망치(한국노동연구원, 1.1%)가 예상대로 실현될 경우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약 5.9%의 임금상승률이 계산된다.

그러나 생산성임금제는 국민경제 차원에서 도출된 평균적 의미의 이론임금인상률로 조건이 다른 모든 부문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기업 임금교섭의 준거로 삼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임금인상률은 기본적으로 노사간 협상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생산성을 기반으로 도출한 평균적 임금인상률을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다. 임금교섭에 의해 결정된 인상률에 유일한 해가 존재할 수는 없으며, 노·사 당사자의 교섭력을 기반으로 협상하여 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즉 노동시장의 여건 외에도 노사관계, 사회적분위기 등이 임금인상률 결정에 보다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임금상승률은 이론임금인상률과 어느 정도의 괴리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2. 2012년 경영계의 임금인상 제시율과 노동계의 요구율 격차 높아

2012년도 한국노총의 임금상승 요구율은 생계비 및 근로자 간 격차해소 등을 감안하여 9.1%로 결정하고, 비정규직은 19.4%의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한편 빈곤문제 해소와 양극화, 차별 완화를 위해 2012년 최저임금 요구액을 시급 5,558원으로 제시하였다. 반면 경영계(경총)는 경기둔화, 인플레이 유발, 양대 선거에 따른 사회적 부담 등 경제불확실성을 이유로 2012년 임금인상률을 2.9%로 제시하였다(표 5 참조).

한편 민주노총은 경총의 임금인상률을 반박하며 소득불균등을 줄이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2012년 임금은 최소 7%(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이상 인상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국노총과 경총 간에 서로 요구하는 임금인상률 격차는 전년인 2011년보다 늘어 약 6.2%포인트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2012년 임금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표 5〉 경영계의 제시율과 노동계의 요구율 및 명목임금 상승률 추이

(단위: %)

	경영계(경총)	노동계		명목임금 상승률
		민주노총	한국노총	
1997	0.0	10.6	11.2	-
1998	-25.0	7.2	4.7	-
1999	0.0	7.7	5.5	-
2000	5.4	15.2	13.2	8.0
2001	3.5	12.7	12.0	5.1
2002	4.1	12.5	12.3	11.2
2003	4.3	11.1	11.4	9.2
2004	3.8	10.5	10.7	6.0
2005	3.9	9.3	9.4	6.6
2006	2.6	9.1	9.6	5.7
2007	2.4	9.0	9.3	5.6
2008	2.6	8.0	9.1	4.4
2009	-	-	-	2.2
2010	0.0	9.2	9.5	6.4
2011	3.5	-	9.4	-0.9
2012	2.9	-	9.1	-

- 주: 1) 1999년 경총은 구조조정이 완료된 기업은 동결, 진행 중인 기업은 임금삭감을 제시함.
 2) 2004년 경총은 300인 이상 기업은 동결, 300인 미만 기업은 3.8% 인상을 제시함.
 3) 2005년 경총은 1,000인 이상 기업은 동결, 1,000인 미만 기업은 3.9% 인상을 제시함.
 4) 2006년 경총은 수익성 저하 기업과 대기업은 동결, 그렇지 않은 기업은 2.6% 인상을 제시함.
 5) 2007년 경총은 대졸 초임 및 고임 대기업은 동결, 그렇지 않은 기업은 2.4% 인상을 제시함.
 6) 2009년도는 '2.23 노사민정 합의'에 따라 노사가 요구율 및 제시율을 발표하지 않음.
 7) 2005년도부터 노동계 요구율은 정규직 요구율을 기준으로 함.
 8) 2011년 이후 민주노총은 전체 정규직 요구율을 발표하지 않고 산별조직이 독자적으로 정하게 함.
 9) 명목임금 상승률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대상임.

자료: 한국경총민주노총한국노총 및 고용노동부 발표자료, 각 연도.

3. 2012년 임금상승률은 5.0%로 전망

2012년 임금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경제성장률은 설비투자 등 내수 관련 지표들의 증가폭이 축소되거나 민간소비나 건설투자의 증가폭이 확대되어 2012년 3.7%의 성장을 전망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성장세의 둔화,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억제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어 3.3%를 전망하였다(한국은행). 한편 취업자 상승률은 경기에 영향을 받아 전년의 1.7%보다 낮은 1.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노동연구원). 한편 실질GDP 전망치를 취업자 전망치로 나누어 실질 노동생산성 전망치를 계산하여 보면 2012년에는 2011년의 2.1%보다 다소 높아진 3.4%의 상승률이 예상된다.

〈표 6〉 2012년 경제전망

(단위 : %)

	경제성장률(실질)		소비자물가 상승률		취업자 상승률	
	2011	2012년 전망치	2011	2012년 전망치	2011	2012년 전망치
한국은행 (2010. 12)	3.6	3.7	4.0	3.3	-	
한국노동연구원 (2011.1)	-			1.7	1.1	

자료 :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2년 1월호.

2012년 실제 임금상승률을 전망하기 위해서 1981년 이후의 연도별 데이터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실질임금(1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상승률, 실질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명목노동생산성상승률, 실업률 등 몇 가지 설명변수를 이용해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실질임금 전망치를 시뮬레이션 하여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추정한 후, 이를 5인 이상 규모의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로 환산하면 2012년에 약 5.0%의 임금상승률이 전망된다.

2011년 임금상승률은 물가상승률과 생산성증가율보다 낮은 수준(1.0%)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2012년은 이에 대한 통계적 반등효과와 공무원보수의 인상(3.5%), 2011년보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의 요인이 임금상승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임금상승률을 낮출 수 있는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빠르게 경기둔화가 진행되거나 2011년과 유사한 경제상황이 지속된다면 임금상승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노총은 2012년 임금인상 요구율을 전년대비 0.3%포인트 낮은 9.1%를, 경총은 0.6%포인트 낮은 2.9%를 제시했는데 이러한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1]

<참고문헌>

한국노동연구원(2011), 『2010 KLI 노동통계』.

황수경·정진호(2005), 「최근 노동시장 동향과 2005년 전망」, 『월간 노동리뷰』 창간호, 한국노동연구원.

황수경·정진호 외(2005), 『한국의 임금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